

전 가 동 향

전력케이블 절연신기술 개발

전력케이블 절연기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전력 신기술이 선보였다.

한전은 3일과 4일 이틀동안 강동지점 관내 시험 선로에서 케이블 절연보강 신기술과 열화진단장비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3차 성능시험을 가졌다.

이번에 선보인 케이블 절연보강 신기술은 땅속에 관로없이 매설한 낡은 선로의 절연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선로에 실리콘의 일종인 XL-Fluid를 주입해 선로 절연성능을 신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 신기술을 사용하면 전체공사비가 도로를 굴착해 선로를 교체하는 공사비의 30%정도에 머물러 70% 정도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한전 배전처는 전력연구원, 강동지점과 함께 케이블 절연보강을 실시한 후 12개월이 지난 선로를 대상으로 전체구간과 구간별 케이블의 절연성능을 점검하고 열화진단장비의 신뢰성을 시험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3차 성능시험은 측정장비별 측정결과와 케이블의 절연과과 강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케이블 절연보강시공 후 효과가 시일 경과에 따라 어떻게 향상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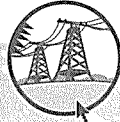
한전은 지난해 6월 성능시험에 착수한 이래, 올 1월 2차 시험을 거쳐 이번에 3차 성능시험을 가졌으며, 내년 6월에 4차 성능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공정거래위 “엄중 조치”

제조물책임(PL)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제조물책임에 따른 위험부

담 회피 및 전각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할 경우 엄중 조치키로 했다. PL법 시행과 관련, 예상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는 원사업자의 PL보험료 등을 수급사업자의 하



전 가 동 향

도급대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해 감액하는 행위, 제품결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금을 할당해 하도급 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제조물책임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정해 부당하게 반품 또는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예방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PL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분쟁

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토록 관련업계에 적극 권장하는 한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원사업자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새로운 하도급법 위반유형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반영하고 PL과 관련한 원도급자와 수급사업자간 하도급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공립대학 보유특허 민간이전 촉진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46개 국·공립대학교들도 재단법인 성격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 소속 교수들이 연구, 개발한 특허권 등을 소유·관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중 특허관리비용 등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의 50% 이상을 연구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은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대폭적으로 상향조정(기존15%→50%)하게 됨에 따라, 최근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현상 등으로 침체

된 공공연구기관에 창의적인 연구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공립대학에 법인격을 갖는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특허권 등을 소유·이전·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에 기술개발 후 활용되지 못해 사장되던 교수들의 특허(2,000여건 이상)를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유기술을 활용하게 되어, R&D활동이 활발한 대학들은 연간 10억원 정도의 기술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수익금은 연구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순수입액의 50% 이상)지급과 함께 대학내의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에 재투자됨으로써 대학의 R&D기능이 더욱 촉진되고 대학의 교수들은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